



손 건 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08년을 기점으로 10.3%에 달하여 최초로 두 자리 숫자에 이르고, 치매와 중풍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시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통적인 효 사상에 따라 치매·중풍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측면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막 첫발을 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끊임없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수많은 검토와 토론, 시범사업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되었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제도의 대상자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노인인구의 3.2%(약 17만 명), 2010년에는 4%(약 23만 명)를 그 대상으로 한다. 경증 노인을 제외하고 주로 중증 노인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도 도입 전부터 수혜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소수의 노인만이 혜택을 본다는 점도 비난대상이었다.

수혜 대상을 중증 노인들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경증 노인들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앞서와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경증노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노인 인구 40만, 50만 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원이 소요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2배, 3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해법은 국민의 부담 수준과 사회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증자에게는 지역사회 예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지라도, 아직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서민경제를 감안하면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둘째,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다.

그간의 노인복지사업들은 주로 공적부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은 이들의 기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비록 양성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관련 직역 간 갈등 해소,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관리체계 확

립, 처우 개선과 적정 임금 보상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착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설 운영자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이 곧바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들 또한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 스스로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젊은 층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셋째, 지속적인 관련 제도 보완 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직도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등급 탈락자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 치매 초기 노인들에게 필요한 재가 예방 서비스 개발, 대상자 범위 확대와 그로 인한 소요재원 확보, 체계적인 서비스 질 평가,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체계 마련, 각종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와같이 큰 제도를 운용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과 격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계속된다면 성공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